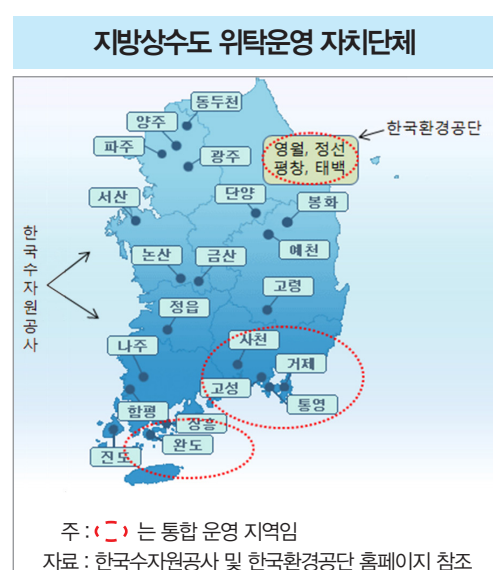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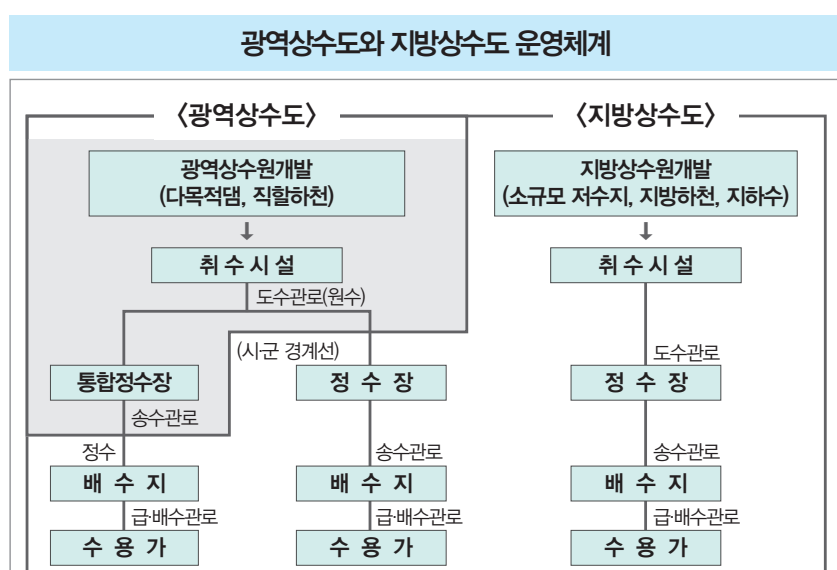


지방상수도 운영 개선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필요하다

지방상수도 운영 현황

- 우리나라의 상수도 운영 주체는 광역상수도사업자(한국수자원공사)와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(특·광역시 7, 특별자치시 1, 특별자치도 1, 시 75, 군 77)가 있음
 -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상수원을 개발하거나 광역상수도로부터 원·정수를 도매가격으로 매입하여 가정 등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소매기능을 수행
- 2014년에는 지방상수도로 44.4억톤, 광역상수도로부터 16.2억톤, 소규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으로 1.5억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
 - 이 중 52억톤은 수도요금에 부과된 유수량(유수율 83.7%)이고, 6.9억톤은 배·급수관에서 누수된 양(누수율 11.1%)이며, 3.2억톤(5.2%)은 무료 사용임
- 현재 1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며 이중 135개 지방자치단체는 직영, 26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
 - 22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, 4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음
 - 전남 남서부권(진도, 완도, 장흥), 경남 서부권(고성, 통영, 사천, 거제), 강원 남부권(영월, 정선, 평창, 태백)은 수탁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



지방상수도 관리체계의 주요 문제점

- 단절적·중층적 상수도 관리주체로 인한 의사결정 복잡 및 협의 곤란, 중복투자 발생
 -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, 환경부의 수질관리,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, 행정자치부의 경영관리,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집행관리 등으로 분할
 -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에 지방상수도 건설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 및 협의가 미흡하여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간에 중복투자 발생
-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업노력 미흡으로 기존시설 이용을 저하 및 재정비효율 발생
 -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상수도를 운영·관리하기 때문에 수도시설(취수시설, 정수시설, 관로)의 중복투자 발생
 - * 2014년의 경우 지방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의 시설용량 대비 이용율은 55.1%, 광역상수도 이용율은 62.1%
- 노후시설의 교체 및 개선이 시급하나 대규모 자원 소요로 적기 투자 불가능
 - 수도시설의 신설에는 50% 국고보조가 지원되나 교체·개선은 국고지원 매우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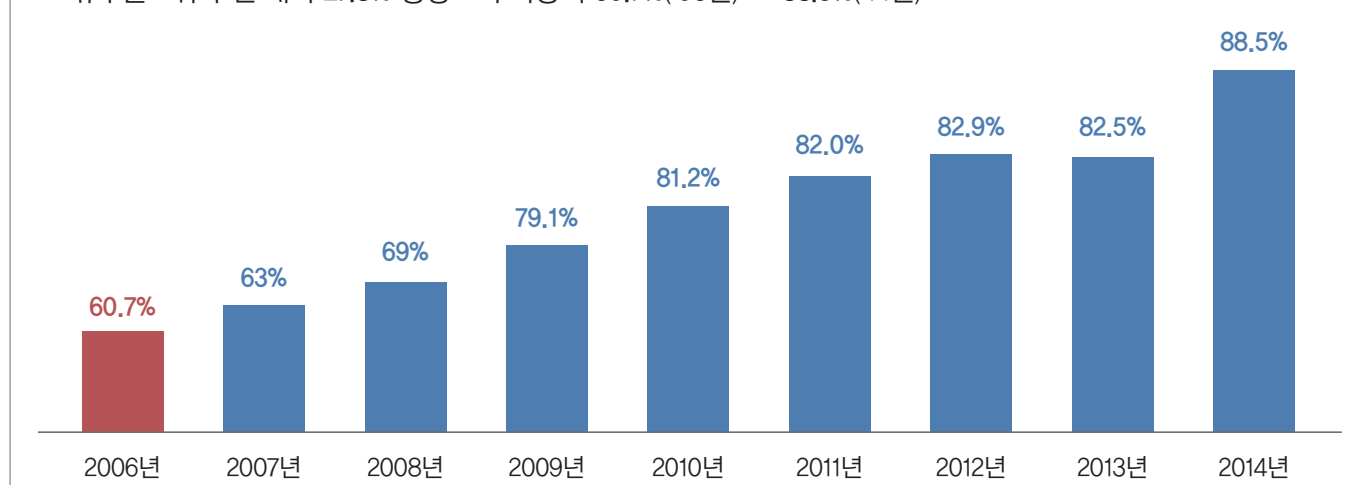
- 지방상수도의 수도관은 2014년 180,688km이며, 이중 21년 이상의 노후 수도관은 53,402km로 28.7%, 수도관망의 노후화로 11% 이상의 수돗물 누수로 인해 연간 약 6,000여 억원의 손실 발생
- 489개의 정수장 중 절반 정도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 심각

지방상수도 위탁 및 통합 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

- 위탁운영은 성과가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 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단체도 있음
- 위탁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수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탁비 등의 분쟁·갈등, 위탁기관의 독점화에 따른 부작용, 수돗물 값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등

성과 있는 위탁 사례 : 동두천시의 한국수자원공사 위탁

- 잔존인력 : 수탁당시 48명('06년) → 4명('14년)
- 유수율 : 위탁 전 대비 27.8% 향상 - 수탁당시 60.7%('06년) → 88.5%('14년)



지방상수도 운영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방향

○ 물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·협력 채널 구축 필요

- 지방상수도 실무협의체 구성·운영 : 중앙 및 관련기관-지방자치단체 참여 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추진방안 도출
- 물 관리 주체별 역할 정립

주체	역할
기획재정부	상수도 관련 예산지원(국고 지원)
국토교통부	광역상수도 계획과 지방상수도 계획 사전 조정 지원
환경부	상수도 운영 기준, 시설비 지원 등 하드웨어 측면 위주로 지원
행정자치부	상수도 경영 관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 위주로 지원
한국수자원공사·한국환경공단	상수도 시설위탁 대행, 기술지원, 교육 등
지방자치단체	지방상수도 시설관리 운영관리 등

○ 지방상수도 운영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

- 지방상수도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현행의 직영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체제(기관장 개방형 직위제)등 및 대도시의 경우 지방공사화로 전환

○ 위탁운영의 경우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의 협력 기구 마련

-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적구성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 증원,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의 협력을 위해 지역주민협의회 신설하여 요금인상 등의 현안 협의
- 수탁업체의 각종 사업 계약 시 국가계약기준(환경부 기준)의 적용을 지방계약기준으로 전환하여 지역 업체 불만 해소

○ 지역특성을 고려한 투자재원조달의 재정거버넌스 다양화

- 재정력이 열악하고 급수인구가 적은 지역은 지방비와 국고보조에 의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며, 급수인구 면에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은 지방비와 국고보조, 그리고 민간투자를 함께 고려
- 대도시의 경우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 투자에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 고려

○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전환

- 지방상수도 운영은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재정적 효율성도 중요
- 주민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질 개선, 자치단체별 직영 운영의 문제, 개별 위탁운영의 문제, 자치단체 예산절감 및 국가적 차원의 중복투자 문제 등을 해소하는 재정 효율성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계별 혹은 광역자치단체별 등의 광역화로의 전환 필요